

#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물 공급, 삼림과 탄소, 어업 할당 사례\*

권상철\*\*

## Contradictions of Neoliberalizing Nature: Water Privatization, Forest-Carbon Trading and Fishery Quota as Examples\*

Sangcheol Kwon\*\*

**요약 :** 본 연구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물 공급, 삼림과 대기, 어업 분야에서 민영화, 국가 관리와 탄소거래제, 그리고 어획 할당제의 자연의 상품화, 신자유주의화 확대를 제1세계와 제3세계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지역 주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환경 문제 개선에서 한계와 모순을 보인다는 비판적 검토를 제시하였다. 물, 삼림, 어류의 부족과 남획은 인구 증가와 무임승차에 의한 공유재의 비극이 아니라, 물 공급 민영화는 제3세계의 물 공급을 통한 제1세계 물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 삼림 파괴는 국가와 국제 자본의 발전과 경제 성장 지향의 결과, 그리고 어류 어획 할당은 거대 자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모순을 드러내는데, 이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자본의 이윤 추구, 즉 탈취적 축적의 사례로 이해하였다. 공동체 기반의 자연 이용과 관리 논의는 공공재의 상품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환경 개선과 지역 형평성을 지향하는 대안으로 제시해 보았다.

**주요어 :** 신자유주의 자연, 민영화, 상품화, 모순, 물 상품, 탄소 거래, 어업 할당제, 제1세계와 제3세계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neoliberalizing nature of water, forest, and fishery which have been recognized as commons. The water commodification, forest use and carbon trading, and fishery quota pursued for economic efficiency reveal limits and contradictions in environmental and equity aspects.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first and the third world relationship and the effects on locales, the causes of dwindling water, forest and fisheries are not from the free ride problem purported 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argument, but from the capitals' profit seeking strategies: water provision by the first world multi-national corporati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encies' development orientation, and the quota allocation of fishery catch working for the large capitals. Such contradictions allow us to understand the neoliberalizing nature as the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of the commons. The commons based community economies could be thought out as an alternative for sustainable environment and equitable local social economy.

**Key Words :** Neoliberal nature, Privatization, Commodification, Contradiction, Water commodity, Carbon trading, Fishery quota, The first and the third world

### I. 서론

최근 신자유주의가 자연(nature) 분야로 확대되며 자

연의 상품화 전개 양상과 결과에 대한 사례 연구가 자연 자원인 물, 삼림, 어업, 광물 등의 특정 지역 경험을 다루며 누적되고, 이론적으로는 시장 원리의 효율성을 내세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Professor, Major of Geography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wonsc@jejunu.ac.kr)

우며 확대하는 자연의 사유화, 상품화를 탈취에 의한 축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Swyngedouw, 2005; 최병두, 2007; Heynen *et al.*, 2007; Castree, 2008a; Mansfield, 2008; 권상철, 2012). 시장원리에 기반한 환경 이용과 관리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자연 분야에 대중화된 공유재 비극론을 적용하고, 더불어 정부의 비효율적 관리와 투자 부족에 따른 실패를 근거로 도입하며, 대상 자연의 사유화, 거래를 통한 효율성 증대, 정부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확대하고 있다.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재산권에 기초하고 가격을 부과하는 사유화, 상품화를 통해 자연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가능하고 정부 실패를 대체할 수 있어 환경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와는 달리 공공 자원의 속성은 시장 원리 적용에 한계가 있어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다(Perreault, 2005; Bakker, 2007; 윤순진, 2008; Lohmann, 2010; 권상철, 2012).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확대는 특히 오랫동안 공유재로 간주되던 물, 공기, 삼림 등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사유화, 상품화되며 제3세계 국가가 시장경제로 편입되고, 지역 주민은 생활 기반인 자연 자원으로부터 배제되며 저항 운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이상훈 역, 2002; Liverman and Vilas, 2006; 이성형, 2009; 김현우 등 역, 2012). 대다수의 사유화, 상품화 대상 자연은 전통적으로 지역 공동체에 의해 이용, 관리되며 공공성과 형평성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근대 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정부 그리고 시장 기반의 신자유주의적 관리로의 변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한 가능성 논의를 여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이 글은 자연의 신자유주의화가 가져오는 환경 이용과 관리의 변화를 물 공급 민영화, 삼림 이용과 탄소 거래제, 그리고 어업 봉쇄와 할당제 관리의 신자유주의화 경험을 검토하며,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이들 자원의 상품화,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관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물, 삼림, 어업에 자연의 상품화, 신자유주의적 이용과 관리의 적용은 제3세계의 불균등한 발전 상태가 새로운 이윤 추구의 토대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생계 기반을 약화시키는 형평성의 문제를 드러내기에, 공유재와 지역 지식에 기반한 공동체 경제의 가능성을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해 본다.

오랫동안 공공재로 이용, 관리되던 물, 삼림, 어류를 대상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최근의 공공재 가치, 공동체 관리에 대한 논의에 보다 자연의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유재의 경제 효율성을 넘어 공공재의 사회 형평성을 강조하는 대안적 관리 방안의 안목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공공재의 비극, 탈취에 의한 축적, 시장 효율성의 한계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환경 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시장 원리를 적용하여 기본적으로 재산권, 가격 메커니즘, 그리고 거래를 통해 환경 악화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자연 특히 공공재의 상품화, 소유/이용권의 할당과 거래 등의 모습으로 적용 대상과 지리적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최병두 역, 2007; Heynen *et al.*, 2007; 권상철·박경환 역, 2014). 최근 물, 삼림, 어업은 신자유주의화의 주요 대상으로 등장하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공공재로 간주되어 오다 시장 기반의 관리로 바뀌며 그 과정과 결과 그리고 자본의 탈취에 의한 축적 논의의 사례로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다(Swyngedouw, 2005; Castree, 2008a; St. Martin, 2009; Lohmann, 2010; Mansfield, 2011; 권상철, 2012; Budds and Sultana, 2013). 이들 자연은 특히 제3세계와 주민들에게 중요한 공공재로 역할 해 왔기에 상품화, 신자유주의화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즉 시장 원리를 통해 자원과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환경 악화에 대한 고전적 주장인 하딘의 ‘공유재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권상철·박경환 역, 2014). 공유재 비극론은 환경을 공공재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와 연계시키는 주장으로, 초기 1968년 사이언스 잡지에 게재된 논문 ‘공유지의 비극’에서 과잉 인구 문제를 다루며 어떤 개인이나 가족은 자유로운 재생산의 장점을 가지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지구 전체로 확산되어 인류의 부담을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지구의 이익을 위해 특정 사람이 더 많은 아이 갖기를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무임승차’하는 상황이 되므로, 과잉 인구는 특정

의 강제적인 메커니즘이 없으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sup>1)</sup>

이 논리는 개방된 목초지의 상황으로 비유되며, 다수의 목장주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강제적 제약이 없으면 즉, 새로이 늘어난 가축에 개별적인 추가 비용이 요구되지 않으면 각 목장주들은 자신의 가축 수를 늘리려 해 목초지는 최악의 결과로 치달는다는 주장으로 전개된다. 목초지는 모든 사람에게 속하지만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목장주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 하고 목초지는 불가피하게 훼손될 것이다. 하딘(G. Hardin)의 말을 인용하면, “공공재의 자유를 믿는 사회에서 각자가 최고의 이익을 추구하면 모든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는 목적지는 폐허이다. 공공재에서 자유는 모두에게 폐허를 가져다준다.”(Hardin, 1968:1243; 권상철·박경환 역, 2014:81에서 재인용). 환경 악화는 사람들에게 상호 동의에 따른 강제나 엄격한 사유 재산<sup>2)</sup>을 선택하게 해 모든 책임을 행위자나 재산 소유자에게 한정시키며 그 해법을 찾으려 한다.

공공재의 사유재산화는 환경 문제 해결에서 시장 원리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불공평하더라도 최선의 해결책으로 등장한다. 공공 자원은 정부 기구나 개인 소유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공유재 비극론 주장은 관리자와 학자 등 많은 사람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대중화되어 현재까지도 주류적 사고로 자리 잡고 있다. 자연 공공재는 어장, 유전, 기후 체계 등 무임승차를 유발하는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비극으로 치닫기에 법과 재산의 방식으로 비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자연 공공재를 사유화하는 방안은 환경 문제의 해결책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권상철·박경환 역, 2014). 대중화된 ‘공공재의 비극론’에 기초해 자연의 효율적 이용

을 위한 사유 재산권, 가격 부과에 기반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관리 방안은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은 미국,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쉽게 받아들여졌고, 점차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자연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Bond, 2004; Mansfield, 2008).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으로 언급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이 자연을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채취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자원의 부족은 자연적 상태라기보다는 자연을 시장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주의의 산물로 고려한다(최병두 역, 2007; 최병두, 2009). 자본주의는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점점 팽창하여 자연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으로 자본주의 스스로 자체의 한계를 생산한다. 환경은 자본주의의 성장에 한계를 제시하는데, 자본주의는 자연이라는 자원을 착취하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이는 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새로운 대안 모색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탈취에 의한 축적이 불러오는 위기와 사회 변동은 자본주의의 이차적 모순으로 불린다(권상철·박경환 역, 2014).

자본주의는 비용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폐기물, 오염된 공기와 물, 그리고 노동자를 위협하는 여러 상태를 생산하며 그 자신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데, 환경 조건은 경제적 생산의 한계이며 자본주의 기업에 의한 자연의 오염은 지구의 건강 그리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위협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 필요를 획득하기 위한 사회적 재생산을 둘러싼 투쟁을 야기하게 되어, 환경운동을 낳아 새로운 형태의 경제 출현으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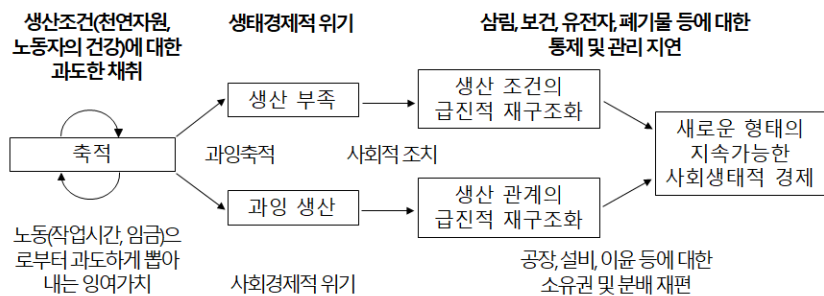


그림 1. 자본주의의 이차적(상), 일차적(하)모순과 환경적-사회적 대응

출처 : 권상철·박경환 역, 2014:158.

자본주의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착취는 경제적 생산과 노동력 재생산 부족의 한계로 이어지며 그 자신의 환경 조건을 항상적으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생태적 착취를 종식시키려는 반대운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권상철·박경환 역, 2014). 자연의 탈취에 의한 축적은 경제적, 생태적 위기를 넘어 자본 축적을 지속시키기 위해 ‘환경적 조정(environmental fix)’을 구사한다(Castree, 2008a). 환경적 조정이란 자본이 이윤을 하락 경향에 직면하여 축적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포섭을 확대시키거나 재조직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의미하는데, 첫째 자연의 사유화(종획)에서 나아가 자연의 상품화 또는 시장화를 통해 자연을 보호한다는 논리 제시, 둘째 자연 환경에 대한 국가 통제를 시장 합리성과 자본 축적에 노출시켜 환경 친화적 동기없이 자본에 의한 자연의 형식적·실질적 포섭을 확대시키는 방안, 셋째 자연을 적극적으로 퇴락 시킴으로써 이윤을 얻기 위해 자연을 형식적·실질적으로 포섭하는 방안들을 포함한다(Castree, 2008a; 최병두, 2009; 김동주, 2015).

이러한 전략은 세계의 환경 공유재인 토지, 물, 공기 등을 약화, 고갈을 명분으로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자연은 무상 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자본이 자산으로 취득하여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하도록 순환되고, 이 과정에 국가 권력에 의해 지원되는 금융 자본과 신용 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최병두, 2009; 김동주, 2015). 이러한 자연의 탈취에 의한 축적은 자본의 위기 대응 전략으로, 실제 인류의 생존과 생계유지와 긴밀히 연계된 공공재인 물, 삼림과 대기, 그리고 어류를 물 부족, 지구 온난화, 그리고 남획에 따른 어획 감소를 명분으로 신자유주의화의 대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Heynen *et al.*, 2007).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공공재의 비극 논리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양한 연구들이 세계의 자원 이용과 관리를 관찰하면서 강제적 봉쇄나 배타적 사유 재산권에 기초한 관리는 환경 자원의 복잡한 체계로 인해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계 자연 공공재에서 여러 형태의 성공적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은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 사용자들은 모두 이기적이

라는 가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데 사용자들이 협력을 통해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경우, 즉 협력에 따른 생태적 혜택이 증가하는 곳에서는 대규모 집단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윤홍근·안도경 역, 2010). 규범과 사회 조직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 경제 옹호자들은 공공재의 비극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는 자유재가 아닌 참여자들이 규율과 협력을 통해 통제하는 상황을 강조한다. 세계에는 다양한 제도들이 특정한 지역 조직 형태를 통해 비공식적인 규칙이나 사회적 규범 등으로 개인의 행동을 제약해 자연 자원을 질서 있고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특정의 형태로 존재한다(Dolsak and Ostrom, 2003; 윤홍근·안도경 역, 2010).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의 실증적인 연구들은 물, 삼림, 토지, 어업, 폐기물, 습지, 나무 등을 사례로 검토하며 생물리적,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Heynen *et al.*, 2007; Castree, 2008b). 이로부터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정치경제적 엘리트에 의해 추동된 자본의 위기 극복 전략으로 환경은 개선보다는 악화로 이어지고 특히 빈곤층을 주변화시켜 저항으로 이어지는 환경사회적 모순을 드러 내기에 비판을 받는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상황, 특히 보편적으로 일찍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환경을 이용하고 관리해 온 선진국과 최근 시장 원리를 적용하며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환경과 발전의 영향, 그리고 제3세계 현지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비판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

더불어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재의 이용이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시장 원리의 신자유주의화의 물결 속에서 간과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환경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 유지하기 위한 복잡한 규칙과 자율 규제의 메커니즘은 전통적 사회 체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을 것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이 아닌 관습과 규범을 통해 기능하는 공유 재산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심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한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문제와 성공적 공유재의 이용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사례 연구들이 제3세계를 시작으로 제1세계

로 까지 확대하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연의 신자유주의화가 표방한 효율적 자연 관리가 환경 지속성과 지역 형평성 측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많은 사례 연구가 물, 삼림, 어류 분야에 기울여 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 자연의 이용과 관리 논의를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해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 III.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사례와 대안 논의

자연의 이용과 관리에 시장 원리의 적용과 확대는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물 공급 민영화, 삼림 이용-탄소 거래, 어업 할당제 관리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 왔다. 이들 공공재의 신자유주의화는 제3세계와 제1세계 간의 불평등한 관계 그리고 환경 개선보다 전통적 공유재 관리의 전통을 붕괴시키며 주민 생계 기반을 위협하는 환경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비판적 안목과 대안 논의의 기초를 제공한다.

#### 1. 주요 환경 자원의 신자유주의화 사례

##### 1) 물 공급 민영화

물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재화이며, 안전한 물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공공서비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20세기 들어서며 제도화되었다(Budds and Sultana, 2013). 또한 물 공급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질병 확산이나 지반 침하 문제 등 양과 질을 모두 통제해야 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기에 정부 규제의 중앙 집중 방식이 당위성을 갖고 보편화된다(Bakker, 2007).

제1세계 국가들은 대다수 물 공급과 관리를 공공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제3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대다수 독립 이후 1970년대까지 후기 식민 수탈에 대응해 채취 산업 부문의 국유화를 강조했으나, 물 공급은 투자 재원의 부족, 정부 관리의 비효율 등으로 공공 서비스로의 진전마저도 그다지 이루

어지지 못한 상태였다(Budds and Sultana, 2013). 여기에 인구 증가와 이용 확대에 따른 물 부족은 위기 상황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며 민영화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특히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의 25퍼센트가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물 수요 관리와 공공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시장 원리에 따른 물 공급 민영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물 공급 민영화는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물 부족, 기근 위협 등 위기를 조장하며, 민간 기업이 물을 공급하며 가격을 부과하는 시장기반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강조한다(Smith, 2004; Bakker, 2007). 특히 1980년대는 제3세계의 경우 부채 위기와 구조 조정의 부담으로 물 공급 민영화 이루어졌으며, 영국을 위시한 일부 제1세계 국가에서도 신자유주의의 확대와 더불어 상수도가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자연 자원이고 오랫동안 공공재, 공공 서비스로 인식되고 이용되어 온 물 공급 민영화, 산업 서비스로의 전환은 특히 제3세계의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심한 반대에 부딪히며 갈등을 겪는다(이상훈 역, 2003; Smith, 2004).

물의 상품화와 공동재 입장은 대비 구도를 이룬다(표 1). 상품 관점은 물도 다른 생필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의 사적 소유와 관리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민간 기업은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 관리하게 될 것이고 물 소비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물은 경제재(economic good)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반면 공동재 관점은 물은 유동 자원이고 생명과 생태계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공동체나 생태계와 함께 하는 대체재가 없다. 따라서 공동체에 의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물 절약은 공동체 단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Bakker, 2007).

표 1. 물의 상품화와 공동재 논쟁

	상품(commmodity)	공동재(common)
정의	경제재	공공재
가격	완전비용 회수	무료 또는 "생명선"
규제	시장 기반	명령과 통제
목표	효율성과 물 보장	사회적 형평성과 생계
관리자	시장	공동체

출처 : Bakker, 2007.

물을 경제재로 분류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로의 전환은 물 공급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1992년 '국제 물과 지속가능한 발전 회의'에서 더블린 선언을 채택하며 민영화를 가속화시켰다. 더블린 선언의 핵심은 물은 모든 경쟁적 이용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에 경제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선언에 뒤이어 많은 국제기구, 특히 세계은행은 물을 경제재로 다루며 대출에 부수하는 구조조정 패키지에 물 민영화를 포함시키며 제3세계로의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Bakker, 2007). 물 공급 민영화는 1990년대 대규모 민간 기업의 개발도상국 물 공급 참여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0년 당시 전 세계 약 5,100만 명 정도가 대다수 유럽과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는데, 10년 후에는 약 46,000만 명 이상이 물 다국적 기업에 의존하였다. 2015년에는 유럽 기반의 물 다국적 기업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약 1,16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며 급성장했다. 제3세계 국가 상하수 공급의 주요 직접 투자국은 프랑스와 영국으로 전체 투자의 약 75퍼센트를 차지하는데, 프랑스 기업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영국과 스페인 기업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국가에 진출하여 후기 식민 지리를 보인다(Budds and Sultana, 2013).

물 공급 민영화는 제1세계 다국적 기업이 처음에는 비용 복구를 위입받는 것에서 시작하여 정부가 관련된 가격 상승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공공 부문에서의 물 공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서서히 일부 또는 완전한 민영화를 진행한다. 많은 제3세계 국가는 부채로 인해 세계은행과 IMF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채무 면제 형태의 지원을 받으며 물 공급 민영화 과정을 거쳤다. 물 공급 구조 조정은 다국적 기업이 기술 이전이나 전문가 파견 등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대부분은 이윤을 추구할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용되며 민영화가 점차 확대되었다(Bakker, 2007). 물 공공재는 위협을 받고 세계 빈곤층들이 물에 대한 접근이 부족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공공재 비극론에 기초하여 민영화로의 변화를 정당화시킨다. 이들은 물을 자유로이 얻을 수 있는 자연 자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과 비효율적인 정부를 물 서비스의 악화와 세계 물 공공재를 고갈시키는 주요 행위자로 지적한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사용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고 정부의 무관심에서

생겨난 결과라는 것이다. 물의 정확한 비용을 반영한 가격을 부과하지 않은 정부의 실패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낭비적 문화를 심어 주었고 그 결과 물 부족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단순한 인과 주장은 빈곤한 제3세계 국가 전체로 대중화되었다.

그러나 물 공급 민영화는 효율적 자원 관리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한계와 모순을 드러낸다. 기본적으로 물 공급은 수원 확보와 수도 관로 등 매우 높은 고정 비용을 필요로 해 자연적으로 독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적 공급을 통한 시장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민간 기업 물 공급은 적정 이윤을 위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선별적으로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며 성장하는 중남미 아메리카와 아시아, 국가로는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 필리핀 등에 집중하고 농촌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부유한 도시를 대상 지역으로 선호한다(Bond, 2004; Perreault, 2005; Bakker, 2007). 이러한 높은 투자비용의 요구는 시장 반응의 기본인 경쟁이 없는 독점 상태로 이어져 가격 상승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 공급에서는 비용 절감을 통한 이윤 추구의 목적을 드러내며 시설 개선 부족의 문제로 이어진다(이상훈 역, 2003; Swyngedouw, 2005).

물 민영화는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특히 서비스가 부족한 소외 지역과 계층의 수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기관의 신자유주의 경제 확대와 민간 기업의 물 산업 분야 이윤 추구를 위해 진행된 것이다. 도시 빈곤 지역이나 농촌의 생계 농업을 유지하는 빈곤층들이 물이 부족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물 민영화의 동기는 국제금융기관과 개발업자에 의해 확대되는 신자유주의화가 자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습이다. 생수의 경우도 안전한 마실 물의 부족을 위해 등장했지만 물 부족은 본질적으로는 공공의 물을 민간의 물로 바꾸어 소유권을 빼앗긴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물 공급 사유화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권상철·박경환 역, 2014). 따라서 물 공급 민영화는 담론화된 세계 물 부족 위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뒤에서 작동하는 이윤 추구의 목표가 제3세계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적 안목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 2) 삼림 관리와 탄소-삼림 상쇄

삼림은 토양 침식을 예방하고, 생명체를 정착시키고,

음용수를 여과시키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인간 특히 빈곤층에게는 식량, 연료, 섬유, 건축 재료 등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환경 자원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삼림은 감소하고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지구 환경 악화의 사례는 아마존의 삼림 파괴로,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토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진행된 무분별한 벌채가 그 주요 원인으로 언급된다(Elliott, 2013; 권상철·박경환 역, 2014).

제3세계의 대다수 삼림은 독립 국가를 형성한 이후 국가에서 관리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의 대상으로 간주된 것이 보편적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독립 이후 근대화 산업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는데, 삼림은 국가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적 이용의 관리 대상이었다. 정부는 삼림을 토양 침식 방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하지만 근대화 과정에 도움이 된다면 활용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해 불모지와 삼림은 경작지로 변모했으며, 목재는 식민 시대부터 선박 건조, 철도, 다리 건설 등 기반 시설 확충에 사용되었고, 임산물은 상업적 상품으로 외화 수입을 위한 수출 작물이 되었다(Springate-Baginski and Blaikie, 2007).

이러한 국가 삼림 정책은 철저하게 지켜져 유향 토지에 종이 등 산업용으로 필요한 나무를 식재하고 보호하며 공공적 이용은 배제하였다. 정부의 삼림 이용과 관리는 유럽의 과학적 방식에 따른 전문적인 ‘과학적 삼림 관리’ 주장에 기초하는데, 수종별 성장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기초해 만들어진 성장표는 삼림 관리자에게 특정 지역의 삼림 생산은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근거로 이용되었다. 이에 기초한 삼림 복원 이론은 삼림이 농사를 위해 개간하거나 자원 이용을 위해 개발하며 제거된 후, 경제의 변화, 인구의 유출, 보전 지향으로의 변화 등을 거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삼림이 회복 또는 복원되는데, 초기 삼림을 파괴하는 경제 성장은 복구와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가정 아래 시행된다(윤여창, 2001; 권상철·박경환 역, 2014).

삼림 복원과 경제 성장을 연계하는 사고는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도 채택되어 제3세계 국가의 대규모 삼림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과학적 삼림 관리는 산업, 건설, 종이, 철도 건설 등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속성 종의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조성하고 종종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50년이 넘는 장기적인 순환기를 설정

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한 자원 통제를 정당화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삼림을 보호하려는 보전 노력은 많은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과학적 이용과 관리에 반대되는 입장이 된다. 과학적 삼림은 개인적 경험이나 해석보다 우월하고 자료와 경험에 기초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대중에게 권위적으로 받아들여지며 널리 수용되고 당연시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아직도 강력하게 행정 부처와 더불어 일부 환경 단체 내에도 남아 있다(White and Martin, 2002; 권상철·박경환 역, 2014).

삼림 악화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개발도상국의 열대우림 남벌에 기울어져 인구 증가와 빈곤이 더 많은 경작지를 필요로 하며 삼림 제거가 불가피했다는 공유재 비극론에서, 발전 지향의 국가와 거대 기업들이 목재 판매와 환금 작물 재배를 위한 플랜테이션 조성을 확대하며 개발과 이익을 추구하며 삼림 제거가 가속화된 것으로 접근한다. 개발은 삼림 복원 이론에 기초해 경제 성장 이후 회복과 복원이 이루어질 것을 가정하며 정당화된다. 과학적 삼림 회복의 개발 지향적 관점은 국가 발전과 이익을 우선시 해 지역 삼림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존보다 개발 지향의 방향은 지역 주민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삼림은 지역 생계를 위한 이용자보다 산업 발전에 필요한 상품으로 간주되어 지역 삼림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계는 국가 발전을 위해 억압되었다.

삼림은 최근 지구온난화 관련 탄소 배출권과 연계되며 거래되는 상품으로 가치화되며, 삼림에 의존하는 지역 주민 배제의 문제와 또다시 연계된다. ‘산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으로 불리는 삼림 상쇄 구매 프로그램은 유엔기후변화 회의에서 도출된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sup>3)</sup>에 포함된 방안으로 그 핵심은 효율적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선진국 배출자들로 하여금 탄소 제거를 위한 신용을 매입하게 하고 이로 인한 금전적 혜택을 개발도상국, 특히 열대우림을 보존하는 빈곤한 주변부, 원주민 집단 공동체에 주자는 것이다(Bumpus and Liverman, 2011). 이 상쇄 프로그램은 부유한 산업 국가의 탄소 배출을 주변화된 지역에서 생계 기반을 포기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

표 2. 세계 삼림 피복의 변화

(단위: 천 ha)

	1995년	2000년	2005년	1995-2005년	1995년 기준 비율(%) 변화
유럽	989,320	998,091	635,412	+12,074	1.22
아프리카	699,361	655,613	635,412	-63,949	-9.14
남아메리카	890,818	852,796	831,540	-59,278	-6.65
북부, 중앙 아메리카	710,790	707,514	705,849	-4,941	-0.70
아시아	574,487	566,552	571,577	-2,910	-0.51
오세아니아	212,514	208,034	305,254	-5,260	-2.95
세계 전체	4,077,290	3,988,610	3,952,025	-125,264	-3.07

출처 : 권상철 · 박경환 역, 2014:241.

용을 지불하여 상쇄한다는 시도로, 환경에 가치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리와 일치한다.<sup>4)</sup>

그러나, 부유한 북부 국가와 기업들이 가난한 남부의 국가에 나무 심는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상쇄 프로그램은 대다수 지역 공동체가 투자에 따른 가치를 얻지 못해 실패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현장에서 관찰된다. 상쇄 프로그램을 위해 지정된 토지는 지역 빈곤층에게는 생존 자원의 손실이고 기업들은 탄소감축을 위해 산업 설비에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실제 매우 적은 탄소만이 제거되었다. 사례로 우간다의 탄소 삼림을 보면, 노르웨이의 석탄 연소 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신 우간다 정부에 나무 재배를 위한 2만 헥타르의 토지 구입비용을 지불 했다. 그러나 나무는 600헥타르에만 심어졌고 이들마저 대다수 생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수이거나 외래종으로 실제 기대보다 훨씬 낮은 탄소 제거만 이루어졌다. 또한 토지로부터 수백 명의 농부와 목축업자를 퇴거시켰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43개만이 생겼다(Lohmann, 2010).

과학적 삼림 관리와 상쇄 프로그램은 식민주의적 함의를 가진다. 삼림 복원 이론의 경우 한 지역의 삼림 쇠퇴는 다른 지역의 회복과 연계되어 있어 한계를 가진다는 문제점을 지리적 안목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 즉, 제1세계의 삼림 회복은 실제 삼림이 제거되는 제3세계 빈곤 지역으로부터 삼림을 채취해 원자재와 상품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다. 삼림의 감소는 무엇보다도 발전의 확대, 특히 상업 작물 재배를 위한 플랜테이션의 확대에 따른 자본주의 농업의 문제이다. 삼림 피복을 대체한 커피와 바나나 플랜테이션을 소유한 회사 그

리고 이들 상품을 사고, 처리하고 다시 파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삼림 피복이 쇠퇴하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제1세계에 본사가 있고, 이들 국가의 은행과 기업이 투자를 한다. 제3세계의 환금 작물 재배는 미국과 유럽에 있는 기업들에 의해 확장되며 삼림 면적이 줄어드는 희생은 제3세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럽의 삼림 증가는 세계의 다른 곳,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속적인 벌목에 의해 가능했으며, 삼림 지역에서의 농업 활동에서 생산한 가치는 멀리 떨어진 선진국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삼림 면적은 착취의 입지에서 축적의 입지로 이동한 것으로 삼림 감소의 위기는 경제 성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주변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삼림 감소에 대한 인구증가와 발전 지향의 국가 정책에 기초한 설명은 세계 시장에서 삼림으로부터의 이윤 추구를 지속시키며, 주변 빈곤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공동체의 삼림 자원 이용권을 강탈하는 탈취에 의한 축적을 은폐시키기 위해 강조하는 주장이다.

탄소 삼림 상쇄 프로그램은 환경에 가치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 시장 접근의 논리에 기초한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비용은 빈곤한 국가에 부과되었고 혜택은 부유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져 실제 환경 개선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의도마저도 의심하게 하게 한다. 대다수의 국가 간 프로그램은 계약이 불분명하고, 규제되지 않으며, 이미 존재하는 경제 관계에 포함되어 있어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선진국의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 또한 친환경적 방향이나 최빈국이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감축이 가능한 중국과 인도 등의 발전중인 국가에 집중



하는 모습이다(Bumpus and Liverman, 2011). 이는 탄소 거래와 상쇄가 환경 보호보다는 기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불균등 발전을 지속시키며 선진국을 위한 위기 관리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는다(윤순진, 2008; Lohmann, 2010).

삼림은 세계 어디서나 근대 국가의 등장 이전에는 대다수 마을 공동체에서 관리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이용해 왔다(White and Martin, 2002; Peluso and Vandergeest, 2011). 이러한 자연의 이용과 관리 전통은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지향의 국가 관리와 제1세계의 자본 축적의 논리에 밀려 사라지며, 삼림은 결국 탈취에 의한 축적의 대상으로 변모하였다.

### 3) 어업 관리: 어장 봉쇄, 어획할당과 거래

어업은 인간 생존을 위해 선사 시대부터 강, 호수, 연안 바다에서 이루어졌다. 1000년대 이후에는 어업이 생존 용도에서 상업적 어업으로 바뀌어 19세기 말에 이르러는 전 세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집약적이고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어획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획은 전 세계적으로 무차별하게 이루어져, 1960년대 이전 북반구에 집중했던 어업은 남반구로 이동하고, 선박들은 디젤 엔진과 냉장고를 갖추어 더 멀리까지 나가 더 많이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레이더, 음파탐지기, 나일론 그물 등의 기술 발전은 어업을 더욱 효율화시켰다. 1970년대에는 전 세계 모든 어장이 개발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어획량 감소가 나타나며 전통적인 어업 기반은 점차 사라지고, 20세기 말에는 상업적 어획이 어종과 마지막 지리적 영역으로까지 도달해 전체 수획이 감소하고 현재의 채취가 지속된다면 2048년에는 모든 상업적 어종이 멸종될 것으로 예측한다(Mansfield, 2008; Muscolino, 2012).

어류 남획의 문제에 대한 공유재 비극론에 기초한 접근은 개인은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재산권 부재는 무임승차로 나타나 과도한 어획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어장의 황폐화는 자유로운 자원 수확 환경에서 어부들의 경쟁적 어획 활동이 어류의 재생산 능력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개인별 배타적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어획은 강력한 정부의 제한과 통제 또는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배타적 채취권을 할당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개

된다. 20세기 후반 어업 능력의 급격한 증가는 개방된 접근 상황에서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남획 문제의 해법은 어장 봉쇄와 총허용어획(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을 정하고 어부에게 어획량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가 가능한 개별양도가능배당(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이하 ITQ) 형태의 재산권을 부여한다(St. Martin, 2001; Mansfield, 2008).

어장 봉쇄는 캐나다와 미국의 대서양변 조지뱅크에서 시행되었다. 이 지역은 대구 어업 붕괴로 잘 알려진 지역이지만 한 때 대구가 풍부하기로 유명해 배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남획이 심각해지자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어장을 폐쇄하였다. 캐나다 동부 해안 바깥의 심해 어장은 오랫동안 어획량이 많았고 접근이 개방된 어장이어서 외국 어선들이 대량으로 들어와 조업하면서 심각한 어족 자원 고갈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가 어장 규제를 위해 취한 초기 조치는 다양한 어로 활동이나 고기잡이 어선에 대해 면허증을 발급하며 수산업 전반을 합리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1976년 캐나다 정부는 해양관습법에 따라 200해리 영해권을 주장하며 전 해안에 적용될 수 있는 획일적 규제 방안으로 어장 봉쇄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 뉴잉글랜드도 이 지역의 어획량 감소는 무정부적이고 너무 많은 어부들이 생계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공유재의 비극 상황으로 보고, 개방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측면의 방안으로 메인만을 격자에 기초해 개방과 폐쇄를 하는 일련의 관리구역을 설정해 운영하였다(St. Martin, 2001: 그림 2).

어족 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인 어획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방안은 어류 남획을 방지할 목적으로 중요한 어족의 연간 총허용어획(TAC)을 제한하고, 할당량 형태로 어획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설정하고 관리구역 내에서는 개별양도가능배당(ITQ)을 배분하는 것이다. 1984년 아이슬란드도 이러한 방안을 받아들여 할당량의 형태로 어족에 대해 개별 재산권을 부여하고, 어획의 효율화를 위해 보다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에게 할당량이 양도될 수 있도록 거래를 허용하였다. 어업 관리의 재산권 기반 접근은 어류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 즉 재산권으로 어획할당제에 기초한 거래가능한 개별할당을 통해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인 어로 행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Mansfield, 2008; 한규설, 2009).

그러나 공공재의 비극에 기초한 접근은 어업 확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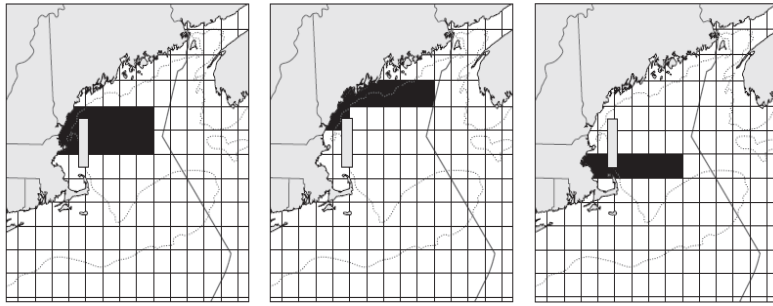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메인만 지역 순환 봉쇄구역도

출처 : St. Martin, 2001:136.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한 이해를 간과한다. 오늘날의 남획 위기는 1950년 이래 진행된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이었던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업 확대에 기인한다. 20세기 들어 급격히 증가한 어업은 역사적으로 정부의 면허제 도입이 어부의 수를 줄이려는 시도로 생각되어 당시 어업에 종사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후에 어업권에 대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상업적 어업 면허를 취득하며 등록 어부의 수가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윤홍근·안도경 역, 2010). 또한 정부는 어업을 높은 이윤을 만들어 내는 근대적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큰 규모와 높은 마력의 선박을 늘리고 그물 등의 도구를 현대화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항구를 조성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어업 합리화 정책에 포함된 효율성, 근대화, 시장 원리의 적용은 노동집약적 어업에 반하는 소수 거대 기업으로의 자본집약적 어업을 권장하는 것이었다.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또한 산업적 어업을 개발도상국가와 빈곤 지역의 발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근대화 모델을 권장하며 모든 어업을 권장한 것이 아니라 농업과 제조업처럼 생계와 지역 시장을 위한 소규모, 노동집약적 어업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높은 이윤을 만드는 근대적이고 자본집약적인 산업적 어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정책 결정자들은 근대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어업보다 산업적 어업을 권장했으며, 개발도상국가는 외화 수입을 위해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늘렸고 이에 따라 어획량이 증가해 남획으로 이어졌다. 실제 소규모 어업은 전체 어획량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고용은 24배나 많아 대규모 어업에 비해 환경적이고 보다 많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너

무 많은 배가 너무 적은 어류를 잡는다'는 대중 담론으로 남획의 책임은 수적으로 많은 소형 선박에 부과되고, 구조 조정 또한 빈곤한 어부가 생계를 위해 남획을 한다는 가정 아래 소규모 어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Mansfield, 2008; Davies and Ruddle, 2010).

재산권에 기반한 총허용어획과 개별양도배분 해법 또한 더욱 상황을 악화시킨다. 재산권을 이동하는 어류 자체에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할당 프로그램은 대신 어류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어획량 할당은 보통 전체 어류의 일정 비율에 대해 보장된 권리를 제공하는데, 어부들은 소유한 선박, 기구 등에 기초해 배당을 받아 대다수의 경우 부유한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자본가는 이전 가능한 할당 허가를 살 수 있어 개별 재산권 할당은 자체적으로 남획을 줄이기보다 현대적 어선으로의 어업 합병을 유도한다. 결국 어획 재산권 할당은 어업의 상업화와 규모화로 이어져 생태계 악화와 소규모 어업 감소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전개된다. 어획 할당은 또한 정해진 할당량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잡아 올린 어류 중 금전 가치가 높은 것만 남기고 크기가 작거나 원하지 않는 종류는 버린다. 이렇게 버려진 어류의 대부분은 상하거나 죽은 상태여서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Mansfield, 2011).

어획 할당량 배정을 통한 사유재산권 접근은 환경에 대한 생태적 책임감을 높여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서구의 근대화 모델에 기초한 어업의 산업화는 남획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현대화된 산업적 어업은 대형 선박을 가진 부유한 자본가 어부와 기업

그리고 북부 국가 소비자 등 일부 집단에게 혜택을 준다. 반면 가난한 어부들은 환경 악화와 비용 증가로 인해 어업에 대한 접근이 어렵게 되고, 생계를 위해 더욱 집약적 어획을 하게 되며 해양 자원을 고갈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어업 할당제의 재산권 배분식 사유화는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과는 반대로 환경 악화와 형평성 문제를 드러내며 자연과 사회에 동시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Heynen *et al.*, 2007; Mansfield, 2008).

어업 관리에서 어장의 순환 봉쇄는 지역 생태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분리시키며 지역 공동체를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어장 관리를 위한 개방과 봉쇄 구역의 격자선은 저해상도 정방향의 지도로 어류 생태학과 거의 관련이 없고, 바다를 일상적 삶의 토대로 살아가며 해양 자원 이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어민들을 소외시켰다(Cinner, 2013). 여기에 어업의 산업화와 어획 할당의 사유화된 채취권은 대규모 기업 선박으로 통합되어 환경 악화를 덜 유발하는 전통적인 소규모 사용자를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해법의 어장 봉쇄와 어획 할당제는 지역 어부보다는 대형 선박 자본가에게 혜택을 주게 되어 해양 생태계와 빈곤층 모두에게 해법이 아니라 문제가 되며 특정 집단의 이윤 추구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Mansfield,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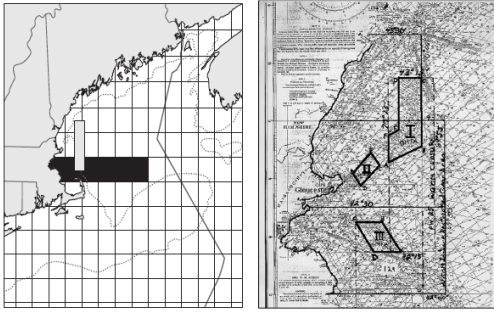
## 2. 대안적 사고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물 공급 민영화, 삼림 관리-탄소 삼림 상쇄, 그리고 어업 할당과 거래의 전개 과정과 결과에서 모순과 문제점을 드러낸다. 자연, 특히 물, 어류, 그리고 삼림의 흡수 능력으로 가치를 부과 받는 탄소와 같은 공공재는 유동하는 속성을 지녀 이들에 재산권을 부과해 관리하는 방안은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자연의 소유권 부여와 더불어 물의 가격 책정, 국가별 탄소 배출량, 어선별 어획 할당의 방식은 관리의 출발점이지만, 이는 재산권에 기초한 자연 보전의 동기 유발보다 거래를 통한 이윤 추구의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며, 역설적으로 물의 경우 소비를 늘리고, 탄소 배출은 서류상의 삼림 보전으로 지속되고, 어업의 경우 현대화된 선박으로 집중된 할당은 더 집약적 어획으로 치달기도 한다(Bakker, 2004; Mansfield, 2008; Lohmann, 2010).

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공유재 비극론에 기초한 재산권 부여나 자연의 상품화는 가정이나 기대와는 달리 자원의 고갈을 심화시키고, 부의 축적을 위해 경제-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지리를 사용하며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드러내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시장 효율성과 과학의 객관성을 빌미로 한 자본의 이윤 추구 전략이라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물, 삼림, 어류를 사례로 검토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에서 재산권과 거래에 기초한 효율적 이용은 보전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최적의 이용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에 기초한 자본의 이윤추구의 전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하고, 소외 집단을 더욱 약화시키는 차별적 결과를 불러와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를 심화시킨다.

자연 공공재가 점차 상품화, 사유화되는 과정은 자본이 효율적 자연의 이용과 관리를 명분으로 공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며, 재산권 부여와 거래 등의 시장 원리에 기반한 방식은 환경 악화를 개선시키기보다 자연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대상으로 포섭되는 탈취를 통한 축적의 상황을 보여주며, 환경 자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주민의 이용권을 배제시키는 문제 또한 심화시키고 있다(Mansfield, 2011).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지역 지식에 기반한 자율적 공유 자원 관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유재의 재발견과 공동체 경제를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한 대안으로 고려하는 관심을 유도한다(권상철, 2016).

공유재 비극론과 시장 원리 적용에 따른 물, 삼림, 어업의 신자유주의화 문제점은 이들 논리에 묻혀 관심을 받지 못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전통적 규범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은 공공재로 있어 왔기에 대중화된 공유재 비극론과 자본의 탈취적 축적의 대상으로 포섭되며 과학적 지식의 권위에 대비되며 지역 공동체의 전통적 관리 방식은 무시되었다. 기본적으로 사유화보다 사용자들간의 규범과 협력이 공공재 이용과 관리에 더 효과적이라는 성공적 경험 사례는 제3세계를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후기발전주의 논의와 더불어 오랫동안 지역 공동체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지역 지식과 이에 기초한 내부의 관습과 규율을 발전시키며 유지해 온 공공재의 이용과 관리가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의 방안으로 관심을 얻고 있다(Gibson-Graham, 2005; 윤홍근·안도경 역, 2010).



**그림 3.** 미국 메인만 어장 어업국의 봉쇄 격자와 어부 제한 구역의 비교

출처 : St. Martin, 2001:136, 138.

과학 지식 대비 지역 지식의 차이는 어업을 사례로 보면 남획의 문제에 대처하는 어장 관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정부의 과학적 접근은 격자형 어장 순환 봉쇄의 방식을 적용하지만 지역 어부들은 장애물, 번식 지역, 식량원과 같은 물리-생태적 해양 환경을 고려한 세밀하고 복잡한 지도를 그려 낸다. 격자형 지도는 모든 어장이 접근을 허용하는 개방된 환경으로 참가에 제약이 없고, 어부들이 행동과 채취를 통제하는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는 문제를 가져, 지역 어부들의 지역 지식에 기초한 공간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St. Martin, 2009).

또한 어업 활동은 공동체 비극론의 가정처럼 무정부적인 것이 아니라 대다수 비공식 제도와 지역 지식 체계가 규제하며 관리한다. 실제로 연안 어업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어부들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김권호·권상철, 2016). 어부들은 어류를 수확할 때 자신들의 지역 지식에 기초한 섬세한 경로 지도를 따르는데, 이 지도는 고해상도의 미세한 지도로 아무 배나 운항할 수 없는 수면 아래의 바다 상황과 위험한 장애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이 지도 없이는 어업이 거의 불가능한 매우 공간화되고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지식을 나타낸다. 이들은 종종 과학 지식에 기반한 국가나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원리 기반의 관리보다 자연 보전의 동기와 생계 보장의 측면, 즉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에서 더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근대화를 추구하는 발전 지향적 접근은 도전을 받는데,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특히 생

계 기반을 빼앗긴 지역 주민들로부터 저항을 받는다. 자연의 공유재 비극론과 효율적 시장 관리는 대중 담론을 통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은폐하며 환경과 지역의 파괴를 가져 왔기에 자연을 시장 가치가 아닌 진정한 가치로 재발견하려는 노력은 새로이 관심을 얻고 있다(Gibson-Graham, 2005; 이용균, 2015). 여기에서 공유재의 재발견은 중요한데, 공유재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확대되며 사유 재산 제도에 따라 구획이 나누어지는 특히 제3세계에서 수탈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상에서 지역 주민들의 공통적인 생계 자원이자 문화적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가치를 부여하며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 지고 있다(McMichael, 2013; 권상철, 2016).

자본주의 일색의 사회에서 공유재의 가치와 대안 모색의 가능성은 여러 장애로 인해 대중화하기 쉽지 않기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Gibson-Graham, 2005; St. Martin, 2009). 신자유주의는 범위나 강도에서 세계적이지만, 공유재는 본질적으로 지역적이고, 취약하고, 퇴화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증거는 세계와 국가 차원에서 쉽게 수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이고 지역화된 공유재에 대한 경험과 성공 사례는 장기간에 걸친 소규모 참여 관찰을 통해야만 구체적이고 복잡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기에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현장 참여 관찰은 공동체 경제에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개인들이 공동체 기반 경제로 인지하는 다양한 지역 자산과 가능성 실행 목록을 만들며 지역 주민 주도의 자본주의 방식과는 다른 '지도 만들기'를 필요로 한다(Gibson-Graham, 2005).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환경 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공유재 비극론에 기초해 시장 원리의 접근을 확대하지만 환경 개선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기에, 오랫동안 공공재로 인식되고 지역 지식에 기초해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 왔던 자연 공공재의 가치와 공동체 관리 규범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해 볼 수 있다. 지역 지식과 공유 규범의 발굴과 공유재의 유지와 부활을 위한 노력은 물, 삼림, 대기 등을 상품화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비판이자 대안 경제를 지향하는 사고의 전환이다. 공유재는 공동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공유재 없이는 공동체도 유지될 수 없기에 공유재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경제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윤홍근·안도경 역, 2010; McMichael, 2013). 오랫동안 지속

되어 왔던 공유재 이용과 관리 규범은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작동하는 제도로 환경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공공재로 간주, 이용되어 왔던 자원의 고갈과 악화를 공유재 비극론에 기초해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따른 결과로 환경 자원의 시장 기반 효율성을 표방하며 재산권 부여와 거래를 적용하는 관리로 다양한 자연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물, 삼림, 어업은 대표적인 공공재로 이들은 물 부족,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 남획에 따른 어류 멸종의 공유재의 비극에 기초한 위기적 대중 담론으로 물 공급 민영화, 삼림 복원을 위한 경제 성장과 탄소 거래와 상쇄, 그리고 총어획 배정과 이전가능할당의 재산권 부여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거래 허용의 상품화, 신자유주의화를 경험하고 있다.

오랫동안 공공재로 간주되던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물, 대기, 어류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지만 유동 자원의 속성을 가져 재산권과 가격 부과가 어려워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관리의 어려움이 한계로 드러난다. 물 공급의 경우 또한 수원 확보와 수도 관로 건설 등을 위해 많은 자본 투입을 필요로 하기에 자연적으로 독점이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경쟁적 공급자가 적정 가격을 형성하는 상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효율적 공급은 거의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현실적으로 물 공급이 제3세계의 경우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영화는 세계적 다국적 기업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그 투자마저도 수요가 많은 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삼림 관리의 경우 유럽의 과학적 삼림 복원에 기초해 삼림을 이용한 경제 성장은 복원으로 이어진다는 개발 지향의 접근을 받아 들어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는데, 이 논리는 제1세계의 삼림 복원이 제3세계로부터의 목재와 플랜테이션 작물 수입으로 가능했다는 지리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삼림-탄소 상쇄 또한 제1세계의 탄소배출 감축을 제3세계의 삼림 보전으로 대체한다는 논리이지만, 실제 삼림 보전이나 식재는 미미하게 이루어지지만, 탄소 배출의 감축의

무를 회피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어업의 경우 어장 봉쇄와 총어획어획과 개별양도배분은 지역 생태환경에 대한 어부들의 물리-생태 지식을 배제한 관리 방식의 문제를 드러내고, 효율적 어업 관리는 대형 선박에 대한 지원과 거래 가능한 어획할당은 이들 자본에 집중되는 결과로 나타나 어획 활동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소규모 어업은 사라지게 되며 어류 멸종도 더욱 가속화되어 환경-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물 공급, 삼림 관리, 어업에서의 신자유주의화는 모두 공유재 비극론이 시장 원리로 이어지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공재의 사유화, 상품화는 특히 제3세계에 아직 공공재로 남아 있는 자연으로 자본이 침투하며 공간 영역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물 공급 민영화는 선진국 다국적 기업이 제3세계 국가에 진출해 공공재였던 자연을 상품화하는 과정이며, 탄소배출의 국가 간 상쇄와 거래는 선진국이 배출을 적게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감축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어류의 경우 소비 증가를 겨냥한 수입을 늘리며 개발도상국의 어획량 증대로 연계된 상황으로 자연 신자유주의화는 신식민지리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공공재의 위기를 지구 차원의 문제로 확대하는 논의는 비판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삼림 감소는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히 이루어지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재성장을 보이지만, 이를 단순히 개발도상국의 남벌이 문제라는 접근보다 선진국이 목재 수요를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충당하며 생겨난 지리적 안목의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또한 공공재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지역 주민들마저 배제하며 이윤 추구를 위한 대상 자연과 공간 영역을 확대하는 탈취를 통한 축적의 양상으로 전개된다고 비판을 가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공공재였던 자연이 시장기반 관리로 변화하며 지역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사라지고, 자연의 신자유주의화가 수반하는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대중적 공유재 비극 담론과 신자유주의 논리에 가려 관심을 받지 못하던 성공적 공유재 이용과 관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평가하고, 재구성해보는 후기 발전적 사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를 제기한다. 공공재는 이기적 사용자에 의해 고갈된 것이라기보다 국가와 시장이 이윤 추구를 위해 공공재를 사유화하며 탈취했으며, 이에 따라 공유재에 기초한 지역 공동체의 전통

과 문화도 파괴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물리적, 생태적 환경에 대한 지역 지식에 기반한 공유재의 성공적 이용과 관리 경험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의 규범을 찾고 현재의 상황에 부합하게 재구성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유재와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유지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최근의 공유경제 논의의 기초로 다루어질 때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註

- 1) ‘무임승차’는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의 ‘변질’이라는 용어로 비유되며 논의가 이어진다. 죄수의 딜레마 논의는 규제와 더불어 대안 논의인 오스트롬의 성공적 공공재 이용과 관리에서도 이론적 배경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윤홍근·안도경 역, 2010).
- 2) 하딘(G. Hardin)은 ‘상호 동의에 따른 강제’는 거부했는데, 이는 공공재 사용자 중 어떤 한 명이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압제적 통치로 이어지며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로 발전할 것이기에 ‘엄격한 사유재산을 선호했다. 이러한 입장은 이후 환경 악화에 대한 생태학과 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용되어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주장의 토대로 역할을 한다(권상철·박경환 역, 2014).
- 3)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의 주요 시행 제도인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계 중의 하나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된 감축실적으로 자국에 부여된 감축량에 포함시킴으로써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감축 달성을 목표로 한다.
- 4) 상쇄는 거래를 통해 실행한다는 점이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데, 효율적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비용 대비 감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감축 한 것을 인정해 주는 방식이지만, 선진국은 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감축을 시도하고 자국에서는 배출을 변화 없이 지속할 수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권상철·박경환 역, 2014).

참고문헌

권상철, 2012, “물의 신자유주의화: 상품화 논쟁과 한국에서의 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3), 358-375.

권상철, 2016, 「지역 정치생태학: 환경-개발의 비판적 검토와 공동체 대안」, 서울: 푸른길.

권상철·박경환 역, 2014, 「환경피플: 이산화탄소에서 프렌치프라이까지」, 파주: 한올아카데미(Robbins, P., Hintz, J., and Moore, S.A., 2010, *Environment and Society*, Chichester: John Wiley & Sons).

김권호·권상철, 2016, “공동체 기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 제주해녀의 공유자원 관리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49-63.

김동주, 2015, “자연의 수탈과 풍력발전: 제주도 바람의 사유화, 상품화, 자본화,” ECO, 19(1), 213-256.

김현우·이정필·이진우 역, 2012, 「기후정의: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에 맞선 반자본주의의 대안」, 서울: 이매진 (Angus, I., ed., 2009, *The Global Fight for Climate Justice: Anticapitalist Responses to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London: Resistance).

윤순진, 2008, “기후불의와 신환경제국주의: 기후담론과 탄소시장의 해부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16(1), 135-167.

윤여창, 2001,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기본 방향,”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주관, 산림정책의 기본 방향과 산림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1-33.

윤홍근·안도경 역,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상훈 역, 2003, 「물전쟁」, 서울: 생각의 나무(Shiva, V., 2002, *Water Wars: Privatization, Pollution, and Profit*, Cambridge, MA: South End).

이성형, 2009,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 서울: 그린비.

이용균, 2015, “신자유주의 개발의 상상력과 포스트개발: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4(2), 293-306.

조효제 역, 2013,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서울: 교양인(McMichael, 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 Washington DC: SAGE).
- 최병두, 2009,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자연과 자본축적 간 관계,” *마크스주의 연구*, 6(1), 10-56.
- 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파주: 한울아카데미(Harvey, D., 2005, *Neoliberalism: A Brief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한규설, 2009, 「21세기 한국 수산업의 고민」, 서울: 선학사.
- Bakker, K., 2007, The ‘commons’ versus ‘commodity’: Alter-globalization, anti-privatization and the human right to water in the global South, *Antipode*, 39, 430-455.
- Bond, P., 2004, Water commodification and de-commodification narratives: Pricing and policy debates from Johannesburg to Kyoto to Cancun and back,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5(1), 7-25.
- Budds, J. and Sultana, F., 2013, Exploring political ecologies of water and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1, 275-279.
- Bumpus, A.G. and Liverman, D.M., 2011, Carbon colonialism? Offsets, greenhouse gas reductio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Peet, R., Robbins, P., and Michael, W., eds., *Global Political Ecology*, New York: Routledge, 203-224.
- Campling, L., Havice, E., and Howard, P., 2012, The political economy and ecology of capture fisheries: Market dynamics, resource access and relations of exploitation and resistance, *Journal of Agrarian Change*, 12(2), 177-203.
- Castree, N., 2008a, Neoliberalising nature: The logics of deregulation and reregul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 131-152.
- Castree, N., 2008b, Neoliberalising nature: Processes, effects, and evalu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 153-173.
- Cinner, J., 2013, Looking beyond the fisheries crisis: Cumulative learning from small-scale fisheries through diagnostic approache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3(6), 1359-1365.
- Davies, A. and Ruddle, K., 2010, Massaging the misery: Recent approaches to fisheries governance and the betrayal of small-scale fisheries, *Human Organization*, 71(3), 244-254.
- Dolsak, N. and Ostrom, E., eds., 2003, *The Commons in the New Millennium*, Boston: The MIT Press.
- Elliott, J., 2013, *An Introduc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4th edition, London: Routledge.
- Gibson-Graham, J.K., 2005, Surplus possibilities: Postdevelopment and community economies,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6(1), 4-26.
- Heynen, N., McCarthy, J., Prudham, S., and Robbins, P., 2007, *Neoliberal Environments: False Promises and Unnatural Consequences*, New York: Routledge.
- Himley, M., 2008, Geographies of environmental neoliberalism, *Geography Compass*, 2(2), 433-451.
- Liverman, D., 2009, Conventions of climate change: Constructions of danger and the dispossession of the atmosphere,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5, 279-296.
- Liverman, D. and Vilas, S., 2006, Neoliberalism and the environment in Latin America,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31, 327-363.
- Lohmann, L., 2010, Neoliberalism and the calculable world: The rise of carbon trading, in Birch, K. and Mykhnenko, V., eds., *The Rise and Fall of Neoliberalism: The Collapse of an Economic Order?*, New York: Zed books, 1-12.
- Mansfield, B., 2011, Modern industrial fisheries and the crisis of overfishing, in Peet, R., Robbins, P., and Watts, M., eds., *Global Political Ecology*, New York: Routledge, 84-99.
- Mansfield, B., ed., 2008, *Privatization: Property and the Remaking of Nature-Society Relations*, New York: Blackwell.
- Muscolino, M., 2012, Fishing and whaling, in McNeil, J.R. and Mauldin E.S., eds., *A Companion to Global Environmental History*, New York: Wiley-Blackwell, 279-512.
- Peluso, N.L. and Vandergeest, P., 2011, Taking the jungle out of the forest: Counter-insurgency and the making of national natures, in Peet, R., Robbins, P., and Watts, M., eds., *Global Political*

- Ecology*, New York: Routledge, 252-284.
- Perreault, T., 2005, State restructuring and the scale politics of rural water governance in Bolivia, *Environment and Planning A*, 37, 263-284.
- Smith, L., 2004, The Murky waters of the second wave of neoliberalism, *Geoforum*, 35, 375-394.
- Springate-Baginski, O. and Blaikie, P., 2007, *Forests, People, and Power: The Political Ecology of Reform in South Asia*, London: Earthscan.
- St. Martin, K., 2001, Making space for community resource management in fisher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1, 122-142.
- St. Martin, K., 2009, Toward a cartography of the commons: Constitut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possibilities of place,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1(4), 493-507.
- Swyngedouw, E., 2005, Dispossessing H<sub>2</sub>O: The contested terrain of water privatization, *Capitalism, Nature and Socialism*, 16, 81-98.

White, A. and Martin, A., 2002, *Who Owns the world's Forests? Forest Tenure and Public Forests in Transition*, Washington DC: Forest Trends.

교신 : 권상철,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로 10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이메일: kwonsc@jejunu.ac.kr)

Correspondence : Sangcheol Kwon, 63243,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rea, Major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Email: kwonsc@jejunu.ac.kr)

투 고 일: 2018년 3월 18일

심사완료일: 2018년 3월 30일

투고확정일: 2018년 4월 5일